

2007년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심의자료 검토 의견

1.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 검토 의견 : 2안 ‘투자재원 폐지’와 연동 검토 필요

- 충남도시가스는 투자재원을 포함하여 루베(㎡)당 80.54원인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8.22원 인상하는 안을 대전광역시에 요구.
-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는 현행 공급비용인 80.54원에서 12.01원¹⁾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도시가스 루베당 포함되어 있는 투자재원을 폐지한 현재의 공급비용을 요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투자재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5.35원 인상된 것으로 인식하게 됨.(투자재원 폐지의 문제는 다음의 검토 의견에서 논함)

<표 1>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안 검토

구분	공급비용(원)		인상액 (원)	인상률 (%)	*연간 소비자부담 증가비용(원)
	투자재원 포함	투자재원 제외			
현행	80.54	73.88	-	-	-
회사요구안	98.76	-	18.22	33.67	8,918,172,479.34
제1안	91.82	85.16	11.28	15.27	5,521,239,614.16
제2안	91.27	84.61	10.73	14.52	5,007,294,437.31
제3안	92.55	85.89	12.01	16.26	5,878,553,879.97

[출처 : 2007년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 ‘대안별 공급비용 산정’(2쪽) 표를 재구성]

※ 인상안으로 제시된 공급비용에 투자재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과 같이 투자재원(6.66원)이 포함된 금액을 제시하였음.

* 연간 소비자 부담액은 가정용(취사용+개별난방용)만 합해 계산하였음.

<표 2> 세대 당 요금부담액 비교(회의자료 3쪽 참조)

용도별	세대수	세대당 사용량(㎡)		현재 요금 (원/월)	인상요금 (원/월)	인상액 (원/월)	인상률 (%)
		년간	월간				
취 사 용	390,909	107	9	5,470	5,520	50	0.91
개별난방	297,518	604	50	30,370	30,640	270	0.88
중앙난방	93,391	970	81	49,200	49,640	440	0.89

[출처 : ‘2007년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회의자료]

- 1) 공급비용 인상액 12.01원을 분석하면 공급비용 자체의 인상액 0.67원(5.6%), 원기기준 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액 4.21원(35.1%), 공급물량조정실패로 인한 패널티 등 7.13원(59.3%)이다.

- 위 표에 제시된 도시가스 인상요금이 어느 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 1>에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안 중 어느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3> 충남도시가스 직원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전체 지급임금 총액(연간)	6,031,903	6,670,972	7,582,597	9,154,256
증가율	-	10.59%	13.67%	20.73%
인원수	136	138	141	148
인당평균급여(연)	44,352	48,340	53,777	61,853
*인당평균급여(월)	3,696	4,028	4,481	5,154
평균임금증가율	-	8.99%	11.25%	15.02%
*동종업계평균임금(월)	3,661	3,859	4,137	4,353
**동종업계평균임금증가분(증가율)	-	5.42%	7.20%	5.21%

[자료출처 : 2007년도 대전광역시 도시가스 요금산정용역 보고서,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재구성

* 인당 평균급여(월), 동종업계평균임금(월)은 천원단위 미만 버림.

** 동종업계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종사자를 말함.

- 충남도시가스의 직원 급여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종사자들보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평균임금증가율은 동종업계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는 공급비용을 과다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급여조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투자재원 폐지(안) 검토 의견

- 투자재원은 도시가스 공급의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하여 지난 93년부터 8월부터 징수해왔고, 금액은 루베(㎥)당 6.66원을 징수하는데, 징수근거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제3항임.
- 또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투자재원으로 루베(㎥)당 6.66원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도시가스 공급자인 충남도시가스는 투자재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그러나 아래 표에 의하면 1.5배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

<표 4> 배관투자재원과 취약지재원을 통한 도시가스 사업현황

구분		합계	1993~2006		2007(계획)
투자 재원	관로매설(m)	91,493	91,761		-
	투자비(백만원)	21,146	30,9580		2,700
	공급세대수	29,687	29,687		-
			1993~2005	2006(추진중)	2007(계획)
취약지 재원	관로매설(m)	50,522	38,206	12,316	-
	투자비(백만원)	18,100	10,275	3,775	4,050
	공급세대수	10,195	7,849	2,346	-

[자료출처 :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 운용계획(대전광역시, 2007), 2007년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대전광역시, 2007)]재구성

※ 2006년 투자재원 및 취약지재원은 추진 중인 내용임.

※ 2007년의 경우 투자재원과 취약지재원 6,750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18km의 관로설비를 통해 4,400세대에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

-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된 투자재원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설비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부조의 형태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금번 도시가스 요금인상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투자재원을 존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①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 불만요인 팽배, ②요금 과다 인상으로 시민경제 압박으로 저항요인 잠재를 제시하고 있지만,
- 단독주택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의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할 경우 관련 비용까지 포함됨으로써 과도한 설비비용을 투자해야 함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를 저해함.

<표 5> 대전지역 도시가스 가정용 용도별 사용량

구분 (단위:천㎡)	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용량	3,253	83	34,092	874	13,300
비율	6.3%	0.2%	66.1%	1.7%	25.8%

[자료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2007년 1월 자료 재정리]

-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사용량을 합산²⁾하여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과 단

2) 취사용과 개별난방용만 합산, 계산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중앙난방이 적용되는 주거형태가 공동

독주택은 각각 97.5%, 2.5%임. 이는 단독주택지역이 공동주택지역보다 도시가스보급이 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6> 대전지역 구별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³⁾

구칭별	총단독세대	보급세대	미보급세대	보급률(%)
계	195,230	104,352	90,878	53.5
동 구	44,236	14,580	29,656	33.0
중 구	35,144	8,680	26,464	24.7
서 구	59,092	43,517	15,575	73.6
유성구	31,994	23,754	8,240	74.2
대덕구	24,764	13,821	10,943	55.8

[자료출처 :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 운용계획, 대전광역시, 2007]

- <표 6>은 각 구별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나타내는데, 원도심 지역인 중구와 동구는 단독주택지역 평균 보급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되어져 부과되는 투자재원을 없애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열악한 동구와 중구주민들이 추후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한 설비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
- ①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 불만 요인 팽배’ 의견에 대해
: 대전시의 주장처럼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절하다면 왜 1993년 8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투자재원을 징수해 왔고, 당시에는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 ② ‘요금과다 인상으로 시민경제 압박으로 저항요인 잠재’ 의견에 대해
: 결국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하면서 현재 80.54원에서 6.66원을 폐지한 요금인상을 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뺀 만큼 요금인상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이는 ‘조삼모사’식 요금인상임)
- <표 2>에 제시된 세대수를 바탕으로 투자재원을 계산⁴⁾한 결과 연간 3,259,880,836.02원에 달하고, 투자재원의 1.5배에 달하는 취약지재원은 4,889,821,254.03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투자되지 못함.
-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남도시가스는 투자재원 대비 1.5배 투자해야 하는 취약지재원

주택인 것을 반영하여 계산한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은 각각 98.1%, 1.9%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주택지역이 단독주택지역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회의자료에 나온 각 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구 61.2%, 중구 60.8%, 서구 92.6%, 유성구 81.3%, 대덕구 90.7%에 달함.

4) 투자재원은 가정용 도시가스에 부담되기 때문에 {가정용도시가스 사용 세대수(취사용+개별난방)×(취사용 세대당 연간 사용량+개별난방용 세대당 연간 사용량)×6.66원}으로 계산하였음.

에 대한 의무가 소멸됨으로써 연간 50억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됨.

- 전국적으로 대전보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은 서울 및 경기지역도 여전히 투자재원을 징수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전이 투자재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리임. 따라서 투자재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3. 취사전용 기본요금(안) 검토 의견

- 현행 취사전용 기본요금인 760원을 3,100원으로 407.9% 인상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도시가스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킴.
- 다른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누진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반해 도시가스의 취사전용 기본요금을 만든다는 것은 적게 사용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음.
- 또한 2006년 둔산지역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난방방식을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여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자, 취사용 대체연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일도 있음. 따라서 취사용 사용가구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취사용만 사용하는 세대가 자체적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임.

4. 수송용 압축천연가스(CNG) 요금(안) 검토 의견

- 의견 없음.

5. 결론

1) 조정사유에 대한 의견

: 대전시는 도시가스요금조정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물량 정산시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도는 이미 이상고온뿐만 아니라, 둔산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에 있음.

따라서 자신들의 오류로 인한 요금인상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표 7> 7대 도시 도시가스 공급업체 수치

<2002년 말 현재>

구 분	자본금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대한	48,500	504,271	558,008	28,977	20,370
극동	30,000	490,434	540,263	18,641	12,465
서울	35,000	492,500	789,028	27,501	19,378
강남	20,000	128,149	143,116	6,169	4,179
한진	44,108	228,870	319,823	13,546	9,515
삼천리	20,275	822,732	1,112,893	51,016	35,335
인천	14,000	126,466	244,884	10,780	7,598
수도권 계	211,883	2,793,422	3,708,015	156,630	108,840
부산	55,000	313,972	345,092	30,631	21,440
대구	14,300	419,117	306,203	9,859	6,456
해양(광주)	11,500	150,643	148,837	9,647	6,594
충남	47,500	149,446	196,457	15,516	10,976
경동(울산)	15,840	254,685	320,228	21,324	14,882

[자료출처 : 한국가스연맹(www.kgu.or.kr) 홈페이지 자료실] 재구성

(2) 재무제표 상 경영이익의 보전이 절실하지 않다.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도시가스의 단기순이익 및 경상이익은 전국 7대 도시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업체의 규모, 시설, 공급량 등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또한 회의자료 [첨부 4]에 나온 충남도시가스측의 2006년 영업실적 요약자료를 보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05년, 2006년 모두 100억원 이상임. 따라서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의 이익보전 및 인상된 인건비 등의 유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일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처럼 민간기업이지만 공기업의 역할을 하는 기업의 순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3) 소비자 동의없는 인상절차 반대

: 도시가스를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 인상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음.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대표가 위촉되어 있지만, 이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도시가스를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정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공청회, 공람 등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공급예측의 문제

: 금번 공급비용 인상 검토처럼 소비자의 문제로 인한 요금인상요인의 발생이 아니라, 공급량 예측의 잘못이 충남도시가스과 대전시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는 2006년 공급물량이 목표물량에 비해 22,484천 m^3 (-4.1%) 적어 패널티를 받아 공급비용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없고, 이를 공급비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함.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함.

(5) 투자재원은 반드시 준치되어야 한다.

: 투자재원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임. 도시가스 취약지역이라 함은 단독주택지역을 말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상당히 낮음(동구 33.0%, 중구 24.7%). 또한 금번에 투자재원을 폐지하는 이유가 공급비용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클 것을 우려해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급비용에 포함된 투자재원을 폐지하는 것임.

그러나 투자재원을 폐지하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주민들은 비싼 도시가스 설비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투자재원을 준치시켜야 하고, 원도심 지역(중구,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포, 전주 등이 제정한 도시가스 설비시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함.